10년 착취 '축사 노예'…조금만 더 관심 가졌더라면

곡성군 두차례 현장조사 불구 실태파악 못해

"전 도의원 말 믿었다" 해명
한 이웃은 피해자와 얘기 나눠
주민들 "또 다른 노인 있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10년간 무임금 노예 사건'〈**광주일보 10월27일자 6면**〉과 관련, 곡성군이 피해자에게 기초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전 도의원의 말만 믿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해 남성을 수년간 곁에서 지켜봐 온 동네 주민들의 부족했던 관심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27일 장성경찰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은 A(67)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했다. A씨에게 10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해온 전 도의원 오모(68)씨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오씨는 A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지난해와 올 초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기초연금과 수급비 지급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곡성군 직원들은 현장실사 과정에서 A씨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그동안의 행적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 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보호자라고 밝힌 오씨의 말만 믿고 수급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후 A씨의 수급비 등은 고스란히 오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곡성군의 현장 실사가 제대로만 이뤄졌더라도 A씨가 지옥과도 같은 농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지닌 채 농장에서 비를 맞으며 일하다 경찰에 발견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했지만 A씨가 워낙 말을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의원을 지내고 군수후보도 된 사람이 동행해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가 10년 동안 일한 곡성 축사와 장성 농장이 위치한 동네 주민들의 무관심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A씨가 일한 농장 주변 마을 주민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정상인과는 다른 A씨가 고생을 하면서도 먹는 것이 시원찮았고 돈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며 "A씨에게 '무슨 90만원이나 받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들도 A씨가 농장에서 다른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끔 봤지만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키고 1억원 가량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7일 A씨가 발견된 농장에서 또 다른 노인이 일하다가 지난 3월 자취를 감췄다는 동네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알고 있지만 피해 사실이 인지되지 않아 아직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군수부인에 금품 주려던 담양군 사무관 결국 퇴출

대법원, 실형 선고

대법원은 27일 군수 부인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담양군 사무관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16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A 씨는 이 날짜로 당연퇴직 됐다. 공무원이 선거법(벌금 1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고 연금과 퇴직수당이 각 50% 삭감된다.

A 씨는 2014년 11월 담양군수 부인에게 현금 2000만원 등을 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직위해제 됐다. /연합뉴스

활기찬 자활 한마당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와 광주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6년 제14회 광주시 자활한마당'행사가 27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복지시설 원장직 물려주려 근무경력 조작

아들·아내 위장취업으로 보조금 3억 챙겨

광주경찰청, 일가족 등 5명 적발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복지시설 원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아동복지시설 전 원장과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동·청소년들의 보육에 사용해야할 보조금과 후원금 3억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로 함평 모 아동복지시설 전 원장 윤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윤씨의 아들(40)과 윤씨의 아내(67), 거래처 업주 2명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아들과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시설관리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2억1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3곳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900여만원을 복지시설 원생 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09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복지시설 인근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물품과 부식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7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자격이 없는 아들에게 복지시설 근무경력을 만들어 원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허위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윤씨의 아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해당 복지시설 원장직을 물려받았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과 아내의 허위 근무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원들에게 근무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복지시설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지만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전남도, 함평군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고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市·道 상생 역주행 결국은…

999번 버스 '과징금 폭탄'

〈나주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갈등…2750만원 부과
나주시 "광주시에 협의 신청"
광주시 "협의 요청땐 적극 검토"

광주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오가는 농어촌 버스 운행회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혁신도시와 광주를 오가는 999번 버스에 대한 운행규정 위반이 확인돼 55건에 과징금 각각 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버스는 혁신도시를 거쳐 광주역까지 운행했지만, 노선 변경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조선대, 전남대 등을 경유했다. '황금노선'을 잠식당한다는 광주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노선 협의가 무산돼 국토교통부까지 조정에 나선 끝에 노선 변경이 인가됐다.

국토부는 당시 중재 방안으로 광주 구간 37개 정류장 중 15곳에서만 정차하도록 했지만, 999번 버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승하차 요구가 강해 이를 거부하면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위반 이유였다.

광주지역 버스 업체 측은 권역별로 운행실태를 감시해 위반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나주시청에 제출했다. 9월 한 달 간 모두 84건이 고발됐으며, 이 가운데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 위반이 아닌 것을 제외한 55건이 최종 위반사례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건당 100만원이지만 경감 조항에 따라 절반으로 감면됐다.

나주시는 "불합리한 정류장 조정으로 이용 승객이 오히려 줄고 있다"며 "광주시에 협의를 신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국토부에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내버스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나주시가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세월호 민간 잠수사 항소심도 무죄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없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당시 동료 잠수사가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이 때문에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간 잠수사는 (해경 등)구조본부장의 명령에 의해 임시 소집됐고, 명단이나 순서도 모두 구조본부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색 권한과 의무도 없는 피고인에게 동료 잠수사를 감독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의 권한은 모두 해경 등 구조본부장에게 있었다며 본부장이 아닌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공씨가 법적으로 동료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친구 만나러 왔다 돈 떨어지자…차비 마련하려 절도행각

쌍나팔

○…광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가진 돈을 유흥비로 모두 쓰고 집에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터미널 여성화장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여성화장실에서 현금 3만원이 든 백모(여·23)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

○…최씨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옆 칸에서 손을 뻗어 문고리에 걸린 가방을 훔쳤는데, 경찰은 "돈을 유흥비로 모두 쓰고 경남 양산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던 최씨가 똑같은 수법으로 가방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39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매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총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경매
장례식장 감정가 116억 8천만, 최저가 116억 8천만
서구 매월동 / 대지 2912평 건물 1311평 / 자연녹지지역 / 40m도로접 / 주차장 완비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8억 9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세차기 / 3기 6구
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 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
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접 / 해변 전망
숙박시설 부지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 2천만
구례군 산동면/ 대지 1013평 / 계획관리지역 / 코너 12m도로접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소재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계곡 산장 매매가 3억 5천만
고창군 고수면 / 대지 300평 건물 65평 / 보전관리지역 / 원두막 10개, 평상 10개 / 하천독점사용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